

“전두환, 5·18 때 대통령 전용기 타고 광주 왔다”

공군 헌병대 수사관 “송정리 제1전비 활주로서 전용기 왔다” 증언 조종사 식당서 전두환과 헌병대장·비행단장 등 회의도 직접 목격 5·18 연구가·전문가 “가능성 충분”…무소불위 권력 조사 필요 진상규명조사위 오늘 현판식…발포명령 등 인과관계 꼭 밝혀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씨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떻게 광주를 찾았는지 등을 둘러보는 등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활동 내역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해당 조사가 5·18 핵심 과제인 발포명령자와의 인과 관계를 밝혀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하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상조사위는 11일 서울 중구 저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조사위원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5·18진상조사위는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전두환의 광주 방문이 이뤄진 뒤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 광주 방문여부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해 발포명령자를 가리는 조사가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했다는 증언 외에도 대통령 전용기까지 이용했다는 당시 공군 헌병대 수사관인 장모(61)씨의 증언이 새롭게 제기된 상황이다.

1980년 당시 공군 헌병대 314기로 입대한 장씨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송정리 제1 전투비행단(현 K57비행장)에서 수사요원으로 광주지역의 첩보활동을 맡았다고 했다. 그는 4월 말부터 5월 초, 505보안부대의 지시를 받아 금남로 일대의 데모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는 등 제1 전투비행단 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장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80년 5월 20일 또는 21일 오후 3~4시께 외곽을 순찰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활주로에 있는 ‘대통령전용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대통령 전용기가 온 데 이상함을 느껴 “비행기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누가 타고 왔냐고 물었더니 보안사령관(당시 전두환)이 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상황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두환과 그 일행들이 상황실 건너편에 위치한 조종사 식당에서 헌병대장, 비행단장 등과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도 직접 목

격했다”고 강조했다. 직접 전두환이 회의를 하는 장면을 봤다는 것이다. 장씨는 “당시 상황실에서 회의가 끝나고 전두환과 정호영이 선무방송을 하는 헬기 콕터에 타고 광주시내를 돌아봤다는 보고가 올라왔다는 내용을 들었다”고도 했다. 광주시내를 돌아본 전두환 등은 다시 식당에 모여 회의를 한 뒤 돌아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장씨는 기억했다. 5·18 연구가 및 전문가들은 기존 증언들을 토대로 “가능성이 있는 증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전두환씨 광주 방문 증언의 경우 크게 4가지다. 공군 706보안부대장 윤진병이던 오원기씨는 “1980년 5월 21일 오전 전두환은 용산 미 8군 헬기장에서 공군 UH-1H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갔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 정보요원 김용장씨는 “전두환이 5월 21일 광주 비행장에 도착해, 광주 상무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에서 정호영 등과 회의를 했다. 회의내용은 ‘총기 사용’과 ‘사

살명령’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을 고려하면 전두환은 1980년 5월 21일께 용산 미8군 헬기장에서 성남 비행장으로 이동해 대통령 전용기로 광주로 와 다시 헬기로 상황을 둘러본 것이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의 대통령에 맞는 권한을 고려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월권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증언도 존재한다. 진중재 당시 2군 사령관은 지난 1995년 검찰 수사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5월18일에서 27일 사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광주 비행장에 따로따로 내려와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백남이 당시 전교사 작전참모도 검찰 수사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광주에 방문했다”며 “1980년 5월 26일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쯤 광주 공

군비행장에 전 사령관과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노 사령관의 경우 광주 상무대 전교사 사령부 복도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전씨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씨의 구체적 광주 방문 시기와 횟수, 이동 경로 등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도 전두환과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은 5월 21일 광주에 간 일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5·18의 발포명령자 규명은 험난한 상태다. 새로 출범하는 5·18진상조사위가 당시 헬기와 대통령전용기의 비행이력, 조종사와 당시 근무자 등의 철저한 조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한편, 광주일보가 이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국방부, 대통령기록원 등에 당시 대통령전용기 사진과 비행이력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묘지 참배하는 시민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가까워지자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이 늘고 있다. 휴일인 10일 오후 가족으로 보이는 참배객들이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식 옛 전남도청 앞서 첫 개최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기념식을 개최해 40주년을 맞는 5·18의 위상을 확고히하고 애국·편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기념식 참석자 현황을 파악중이다. 애초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대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치르는 쪽으로 추진해온 보훈처의 기존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에 들어간데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이 5·18 민중항쟁 최후의 항쟁지라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3단체는 보훈처의 도청 앞 광장 기념식 개최 방침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체별 65세 미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석자 70명을 확정했다. 보훈처는 5월 3단체 참석자를 비롯, 정부 관계자, 정치인 등을 고려하면 400명 가량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경찰 수사 과정 파손 7억짜리(?) 유물 배상 책임은?

“헝그랑!”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전시관 수장고에 보관하던 도자기를 들어올려 밑바닥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주전자 형태의 덮개 부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덮개 꼭지가 떨어져 나가 파손됐다. 경찰이 파손한 유물은 이른바 ‘명대청 화요재영회집회’라는 도자기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가 600만 위안(현재 환율 기준 10억·파손 전 가치)에 달한다는 감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던 유물이다. 유물을 임대해준 A씨는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자기를 파손한 경찰과 유물 관리를 맡은 고흥군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고흥군이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군의 경우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관들에게 도자기 취급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자기를 보존·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고흥군 수장고 보관 도자기 확인하던중 덮개 꼭지 떨어져 유물 임대자 7억원 손해배상 법원 “감정결과 신뢰성 부족 정부·고흥군 2000만원 부담” 경찰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다른 과실로 도자기를 파손한 만큼 정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4월 3일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주전자 형태의 ‘명대청화요재영회집회’라는 중국 도자기를 한 손으로 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뚜껑 부분을 떨어뜨려 꼭지가 떨어져나가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가짜 도자기를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고대 도자기로 속여 고흥군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씨가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수사를 위해 수장고를 찾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7월, 고흥군

에게 중국 고대 도자기 등 3500점 이상을 2035년까지 20년 간 임대해주고 임대료로 고흥담양분청문화관 개관 전까지 2억4000만원, 개관 이후에는 문화관광료로 수입액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명대청화요재영회집회’를 비롯한 3666점의 도자기를 고흥군에 임대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감정평가위원회감정결과(7억1900만원)를 토대로 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3곳에 감정을 의뢰, 각각 600만 위안(파손 전)-180만 위안(파손 후), 16억(파손 전)-4억8000만원(파손 후), 10억(파손 전)-900만원(파손 후) 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3곳의 감정결과 편차가 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점,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고미술협회의 견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가액산정이 곤란한 점, A씨가 해당 도자기를 5000만원에 사 3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 7,913,565,060원 최저가 : 4,431,597,000원(56%)

다 세 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무등산이스트리
전용 : 176.4㎡(53.4평) 대지권 : 313.59㎡
감정가 : 559,000,000원 최저가 : 391,300,000원(70%)

다 세 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트라운하임
전용 : 243.2㎡(73.6평) 대지권 : 622.57㎡(188.3평)
감정가 : 960,000,000원 최저가 : 672,000,000원(70%)

아 파 트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전용 : 125.95(38.1평) 대지권 : 71.37㎡(21.6평)
감정가 : 381,000,000원 최저가 : 266,700,000원(70%)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